확정도 교체도 부담…고민 깊어지는 새정치연합 지도부

'당비 대납' 악재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자격 어떻게 될까

중앙당 선관위 자격 부여·박탈 놓고 민주-새정치계 이견

검찰, 비서관 등 2명 구속 수사 확대…각종 의혹도 난무

당비 대납 의혹이 전남지사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당비 대납 의혹이 이낙연 의원의 후보 확정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이어 전남지사 후보 확정 여부는 수도권 등 전체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긴박한 중앙당 후보 자격 논의=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우선 이날 오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구 새정치연합 측의 선관위원들은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 민주계 선관위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1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11일 오후와 저녁에는 연속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의원의 후보 자격 부여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12일 최고위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의 후보 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 의원은 11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경했다.

한편, 후보 등록 마감이 1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당은 늦어도 12~13일에는 후보 확정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중앙당 내외에서는 후보 교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교체가 된다면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전략공천설과 함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재실시론도 거론되고 있다.

◇고민 깊어지는 지도부, 파장 염려=일단 지도부의 고민은 크다.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이어 전남지사 후보를 교체한다면 그 파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당비 대납 의혹이 경선 전에 불거졌는데 이제서야 문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비 대납 의혹을 바라보는 지도부 인사들의 시각도 확연히 다르다. 구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당비 대납과 관련, 이 의원 측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 민주계에서는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교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이 의원의 후보 자격 확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정가에서는 거액의 뭉칫돈 유입설과 이 의원 측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후보 교체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 회의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후보 교체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뭉칫돈 유입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당이 후보를 지켜줘야지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후보를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전남도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명 구속한 검찰은 수사 확대중=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 이 의원 측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법 하선화 판사는 지난 10일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관계자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8일 비서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B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경선(10일)을 이틀 앞두고 체포한 것은 경선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라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 "혐의가 그때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대납 당비 액수보다 늘어났고, 검찰이 구속한 A씨가 애초 선관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소환 등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및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속된 관계자의 휴대폰 자료를 대검찰청에서 복원했는데, 그 안에 수 억원짜리 수표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등 갖가지 의혹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보고 받은 바 없다", "수사상 확인해줄 수 없다"며 각각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0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공론조사 선거인들이 줄을 서서 투표하고 있다. 이날 경선에는 참여의사를 밝힌 선거인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아 대표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0~50%대 투표율…공론조사 대표성 논란 새정치 후보 경선 조직동원 시비도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도입한 공론조사 경선이 선거인단의 투표율 저조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조직동원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결과, 991명 중 410명이 참여해 41.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5곳에서 실시된 시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율도 50~60%대를 기록했다. 도농복합지역인 광산구는 투표율이 50% 초반을 기록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중앙당의 전화조사에 응한 해당 선거구 유권자로 구성됐다. 선거인단은 특정 장소에 모여 후보 3명의 토론회를 보고 투표를 한다. 선거인단에게는 식비와 차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말에 선거인단이 토론회를 보고 투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의 경우 장흥실내체육관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2시간 소요되는 지역이 많았다. 자발적으로 가기 힘든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후보 측에서 차량을 지원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가 대부분 선출됐다.

모 광주시의원 후보는 11일 "조직력 싸움이어서 공론조사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투표율도 낮아 대표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 후보는 "선거인단이 현장에 오기 전 표심이 결정돼 현장에서 토론회의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관계자는 "대의원 투표율이 80%대, 권리당원 투표율이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공론조사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애초 예상했던 결과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으로 경선 방식을 미리 정하는 등 예측 가능한 경선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윤장현 후보 매머드급 선거캠프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 합류

공동선대위원장 등 맡아 기초단체장·의원 합세 주목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 받으면서 선거캠프가 매머드급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11일 윤장현 후보 측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중앙당의 전략공천 이전 윤 후보를 지지했던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공동선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박혜자·강기정·김동철·장병완·임내현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은 최근부터 윤장현 후보 선거 캠프에서 열리는 선거 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조영택 전 국회의원도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강기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선거 캠프를 진두 지휘하고 있고, 박혜자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본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선거 막바지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별로 각각 지역 언론사를 맡아 전략공천에 대한 당위성 설명과 함께 지역민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 여론 확산 속에 윤 후보와 5명의 국회의원은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된 만큼 윤 후보의 당선 여부가 이들의 정치행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만큼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합세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